



유로채권 발행, 프랑스 · 독일 합의 불발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프랑스와 독일은 8월 16일 정상회담을 열어 공동경제위원회 창설과 금융거래세 신설 등 유로지역 위기 대응 강화 방안을 제안함.

- 유로지역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에 합의한 양국은 2012년 중반까지 균형예산을 헌법으로 채택할 것과 채무감축 노력이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을 것을 경제위원회 창설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함.
 - 이에 대해 영국의 가디언은 공동경제위원회가 단일 지도자가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 경제정 부라고 평가한 반면, 다른 일각에서는 회원국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.
- 또한, 양국은 9월 EU 정상회의에 금융거래세 부과 방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함.
- 한편,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들 국가의 주도로 2013년 공동 법인세 도입이 입안될 것으로 전망함.

■ 그러나 금번 정상회담은 유로채권 발행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함에 따라 유로지역의 위기감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함.

- 정치적, 경제적, 법적 이유로 인해 유로채권 발행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.
 - 그리스, 포르투갈 등 재정 부실 국가의 부채를 떠안는 것에 대한 자국의 부정적 여론, 유로채권 발행으로 인한 국채발행 금리 상승(독일의 경우), 유로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난관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.
 - 독일은 유로지역의 채무 위기가 유로채권 발행과 같은 일회성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각국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함.
- 특히, 유럽의 2/4분기 경제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, 유로채권 발행의 불발은 유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.
- 유로화는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약세를 보여 16일 현재 달러에 대해 0.2% 하락하였으며, 엔화에 대해서도 0.4% 하락함.

(Financial Times 8/17)